"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중소기업계, '한목소리' 촉구
중기단체협, 필요성 등 토론

중소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현수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 만 아니라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 조정하고 중소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생태계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주제 발표자로 나서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덕성여대 송혁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등 8명의 업계대표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법제도가 정비, 개선되고 정부부자 등으로 ICT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이 확대된다면 중소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중소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정체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라고 역설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2004~2008년 사이에 총 137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파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파견법 개정시 자영업자가 최대 연 3.6만명 감소하고 근로자로 전환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3색 3국 키위 21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비타민을 보충해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키위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키위는 해남의 골드키위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산 키위로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간 '해남산 골드키위(10-12입/1팩)'을 5980원에, '프랑스/이탈리아산 그린키위(10-12입/1팩)'를 각 4980원에 판매한다.

전북중기청, 내달 22일까지
中진출 인증 지원사업 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오는 4월 22일까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전자 분야 CCC(강제인증), CQC(자율인증) 및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시험검사, 등록 대행을 일괄 지원 하며, 1개 기업당 소요비용의 70%(2,000만원~1억원)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1개 기업당 소요비용의 70%, 5,000만원 한도로 각종 환경법규, China RoHS & REACH 등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한 등록 및 시험을 지원한다.

또 환경·노무·조세·안전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분야별 법규 및 기업 문의에 대한 경영 애로지원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농어촌공 동진지사, 운영대의원회 개최
"안정적 용수공급 · 재해대비 최선"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인수)는 지난 18일 지사 3층 물관리상황실에서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물관리 농업용수 공급계획에 따른 물관리현장 의견과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농업인을 대표로 구성된 운영대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김인수 지사장은 인사말에서 "전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연간 소요되는 농업용수량이 380,000천톤이고, 3월현재 섬진제 저수량은 67%(175백만톤)이므로, 올해에는 묘대급수를 생략하고 이앙급수(5월11일경)부터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진지사에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대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집단못자리 설치와 논물가두기 운동, 건답직파 유도, 농업인 소유 관정을 최대한 활용해 한해대책에 따른 농업인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대의원 구성은 농업인 16,824명중 15명 이상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선출되어 위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기요금 1%만 내려도 2900억 원가 절감"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8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는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21일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 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됐다. 수요 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15년은 2.2%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네 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 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개선책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 및 상시화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뿌리산업·시멘트 등)에 다양한 선택요금제 마련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 필요 등이다.

한전은 2015년 역대 최고인 약 11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석탄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내려갔지만, 전기 판매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 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고려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됐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음원사이트 '엠넷닷컴' 소비자만족도 가장 높아

국내 4대 음원사이트 중 엠넷닷컴의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음원사이트의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5점 만점)는 엠넷닷컴(3.60점), 멜론(3.59점), 벅스(3.57점), 지니(3.5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엠넷닷컴은 정보·결제 안전성(3.39점)과 사이트 구성(3.60점), 서비스 체험(3.52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해은 기자

CCTV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과징금 2억9000만원 부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관련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해온 제작·설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발주한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9개 제작·설치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 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고,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9개 업체는 지난 2011~2014년 지자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 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입찰의 경우 '하이테콤시스템'이 기술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고, 낙찰 예정자인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8억8570만원에 사업을 따냈다.

서울 은평구가 발주한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에서는 '한일에스티엠'이 '아파트피아'와의 가격 담합을 통해 6억27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낙찰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한 뒤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주기자

익산국토청 전주관리사무소
내달 1일까지 과적차량 단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3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경찰서, 전북도로관리사업소,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적재중량 초과차량, 적재불량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도 집중 단속한다.

현장 합동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및 우회도로 길목 등에서 불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농기계 업체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농기계 업체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농기계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기계 개발기업과 관련 부품 생산기업이다.

지원은 농기계 업체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검정인증 지원,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국영문 홍보 브로셔 및 동영상 제작 지원, 농기계 업체의 애로기술 해소 및 제품 차별화를 위한 기술 컨설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또는 (재)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로 문의하면된다. /신광영 기자